

문 대통령 “4차 추경 7조8000억원 편성”

제8차 비상경제회의의 모두발언서

“맞춤형 지원에 3조8000억원 투입… 소상공 등에 집중 피해 비하면 매우 부족… 어려움 견디는데 힘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긴급 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4차 추경 규모와 관련해 7조원 중반대 정도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는 결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업체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지역업체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다. 부족하더라도 어려

움을 견뎌내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며 “10조원의 고용안정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며 “우선은 부모님들의 아이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교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

성”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끝바로 착수하여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시스

세원 관리 ‘촘촘하게’ 탈루·탈세 방지

민주 김수홍 의원 세법개정안 3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갑, 기획재정부원회)이 지난 9일 촘촘한 세원 관리를 통해 탈루,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김수홍 의원은 발의한 ‘국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성이 SNS, 블로그 등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전자상거래업자의 기본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업자의 탈세행위를 감시,적발할 수 있도록 해 전자상거래업자의 세원관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성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주식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주주의 탈루 여부를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해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재산을 명의신탁한 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에도 거주자인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수홍 의원은 “3건의 세법개정안을 통해 탈루·탈세 윤치임을 보다 정밀하게 감시·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잇따른 자연재해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금융센터 추진, 위상에 걸맞게”

도의회 예결위,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창2)는 10일 2020년 전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안과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각종 현안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 및 추진계획을 묻는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김만기 위원장(고창2)은 “이번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우리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계대책, 일자리지원사업, 수해복구사업에 대해 제대로 투자되었는지 점검하겠다”며 “방역대책 등 도정현안 필수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와 낭비적요인이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재정지출도 개선 및 전북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북도만의 특화된 탄소와 금융산업을 내발적 발전전략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도금융센터 추진과 관련

해 전북도를 세계 자산운용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위상에 걸맞은 규모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기재 의원(전주4)은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의 자체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조속한 개발을 주문하며 코로나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는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청정한 전북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영업제한기간을 위반한 업체의 행정처분을 강력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로 힘든 도민들의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양 기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며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책임성을 가진 공공 부문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의회, 예결특위 구성

위원장 - 송승용 의원

부위원장 - 한승진 의원



송승용 위원장

한승진 부위원장

전주시의회는 내년 분예산 및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다뤄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승용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2동), 부위원장에 한승진 의원(비례대표)을 각각 선출했다.

송승용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현실인 만큼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환경 개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송 위원장은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에 대해 “일차로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체계 확충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 검토 및 선심성 예산편성 등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어 “관행적으로 반복해서 편성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전수형 뉴딜, 민생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윤성 기자

“순창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즉각 착수를”

최영일 도의회 부의장, 순창군의회·풍산면·유등면 피해농민 대표와 농어촌공 본사에

삼진강댐의 무리한 방류로 수해 피해를 입은 순창군 주민들이 농어촌공사 본사를 찾아 집단 항의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순창군 상습침수지역의 배수 개선사업 진행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10일 오후 신용균 순창군의회 의장과 의원, 전북도의회 최영일 부의장(순창), 순창군 풍산면, 유등면 피해농민 대표 등 20여명이 전남 나주시 농어촌공사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홍수피해 공범인 농어촌공사는 빈발을 일삼지 말고 순창군 상습침수구역 배수개선사업에 즉각 착수하라”며 강력하게 항소소리를 냈다.

신용균 군의회 의장은 “지난 8월 초 순창군에는 누적강수량 554밀리미터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면서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물장사 목숨에 수위조절에 실패한 후 갑작스럽게 대량방류해 순창군민들이 물폭탄에 속절없이 노출되며 삶의 터를 잃고 말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결국 농어촌공사의 무책임한 말잔치가 이번 8월의 홍수피해 규모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는 이번 홍수피해의 공범”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농어촌공사가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 핵심은 맞춤형 배수개선사업



10일 오후 신용균 순창군의회 의장과 의원, 전북도의회 최영일 부의장(순창), 순창군 풍산면, 유등면 피해농민 대표 등 20여명이 전남 나주시 농어촌공사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물폭탄이 배수개선시설 미비라는 요인과 더해져 피해규모를 키운 것이다.

풍산면과 유등면 피해농민 대표는 “유등면 등 순창군 내 피해가 집중된 지역들은 지난 2010~2011년에도 유사한 침수피해가 있었다”면서 “당시 농어촌공사는 재발방지책을 약속했지만 말뿐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결국 농어촌공사의 무책임한 말잔치가 이번 8월의 홍수피해 규모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는 이번 홍수피해의 공범”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농어촌공사가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 핵심은 맞춤형 배수개선사업

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수 차례의 침수피해에도 방기하다 이번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또한 최영일 도의원과 참석자들은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에게 “순창군 무수리와 외이리 등 유등면 일대 및 적성면 신월마을을 올해 안에 배수 개선사업 신규지구로 지정해 물난리에도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미 추진 중에 있는 풍산면 일원의 적성지구 배수지구개

선사업에 수량 재산정을 통한 추가 배수장 신설과 우수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공동주택 취득 금지

이용호 의원, '사모펀드 주택매입 금지법' 대표 발의

국회 이용호 의원은 10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공동주택 취득을 금지하는 사모펀드 주택매입 금지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해당 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건축물 및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부동산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모 사모펀드가 46세대가 실거주하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1개동을 통째로 매입하려다가 취득가액의 64% 가량을 대출로 충당할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절



이용호 의원

회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사모펀드가 사각지대를 악용해 강남 한복판에서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투자를 시도한 것으로, 부동산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지와는 상반된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 스마트 신호운영 구축사업 예산 확보

민주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시스템인 ‘전주 스마트 신호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24억원 확보했다.

이번에 확정된 스마트신호운영체계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주 시내 총연장 39.3km에 걸쳐 시행된다.

특히 스마트교통센터를 구축해 신속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차세대 교통체계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교통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교통신호 운영체계를 갖추는 사업이다”며 “전주시에 시민 중심의 스마트 교통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상시교통정책 구간의 지체 시간을 단축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대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도로상에 차량 특성, 속도 등의 교통 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 이를 토대로 도로 교통의 관리와 최적 신호 체계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행시간 측정과 교통사고 파악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엔 확정된 전주스마트신호 운영 구축사업은 내년을 시작으로 2022년에 완공 될 예정이며 긴급차량 우선 신호, 스마트교차로 관제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